
푸드플랜 추진에 대한 몇 가지 제언

허 남 혁(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정책위원)
hurnh@naver.com

1. 서론
2. 몇 가지 문제점
3. 제언
4. 결론

푸드플랜 추진에 대한 몇 가지 제언

나라의 운명은 국민들의 먹는 방법에 달려 있다.

La destinée des nations dépend de la manière dont elles se nourrissent.

- Jean Anthelme Brillat-Savarin (1825) <Physiologie du gout> (브리야 사바랭, (2004) <미식예찬>)

1. 서론

- 푸드플랜의 시대, 필요성과 세계적 추세
 - 먹거리 이슈의 다기능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: 건강 이슈, 환경 이슈, 사회 이슈, 도시 이슈와의 연계성과 새로운 가치
 -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(SDG)의 Goal 2: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를 위한 사회적/경제적/환경적 균형전략
 - 국가푸드플랜: 영국(2010), 호주(2013), 프랑스(2010, 2014, 2018), 핀란드(2017), 스웨덴(2017), 캐나다(진행 중), 미국(시민사회 제안)
 - 프랑스와 스웨덴의 경우,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지방정부들도 지역푸드플랜을 수립하거나 수립 중에 있음
 - 지역푸드플랜: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협약(2015.10) 이후 전 세계적으로 도시지역의 사례들이 급속하게 확산 중
- 정부의 현재 정책추진 현황
 - 국가푸드플랜: 2017년 5월부터 논의 시작, 현재 막바지 작업 진행 중(내년 초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)
 - 지역푸드플랜: 1) 지원 사업 진행 중(지자체 푸드플랜 수립지원, 지역거버넌스 지원, 교육 지원 등), 2) 농림축산식품부 내 먹거리선순환체계구축 추진단(TF)과 전문가 자문단 운영, 3) 지역푸드플랜 가이드북 제작 배포(2018.2) 및 푸드플랜 수립지원 지자체 대상 워크숍 개최

4 푸드플랜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?

그림 1. 도시 먹거리 네트워크의 전 세계적 확산 (Moragues-Faus, 2018.6.20.)



- 자체 지역푸드플랜 추진: 1) 전주(2015)와 서울(2017)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기수립, 2) 대전과 수원은 지역시민사회 주도로 추진 중인 사례(대전 푸드플랜네트워크, 수원 건강먹거리시민네트워크), 3) 아산은 신활력플러스사업(아산사회적경제 먹거리거버넌스 추진)과 지역푸드플랜을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

2. 몇 가지 문제점

1) 중요한 지점들

- 첫째, 사회 전반적인 문제인식과 개념의 공유 여부
- 둘째, 관련 분야 간 협력의 의지 확인과 연대
 - 부처 간, 시민사회 단체 간, 전문가 간
- 셋째, 정부 차원의 의견수렴의 장 마련의 필요성

2) 현재 문제점

- 첫째, 냉정하게 판단하건대 현재의 푸드플랜 추진은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수준에서의 단독플레이에 불과하다는 문제

- 푸드플랜의 필요성은 농업/먹거리의 새로운 다기능성에서 출발함: 보건, 환경, 문화, 교육, 주민자치/공동체 등
 - 타 부처는커녕 타 부서와도 협의가 어려운 구조이며, 농특위 발족 이후에도 타 부처와의 협력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됨
 - 도시재생, 커뮤니티케어, 주민자치, 사회혁신, 사회적경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제와 푸드플랜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건대, 이들 정책과제 주체들과의 협의는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?: 현재는 농림사업 프레임 속에서 농림사업간의 연계 정도만 고려하고 있는 상태로 파악됨
 - 타 부처와의 협력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다면, 타 부처사업의 예산 활용을 통한 푸드플랜의 실효적인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도 있음: 농식품부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어려움
 -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푸드플랜을 추진하는 농식품부가 정부와 사회 내에서 파워가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차이가 있음
- 둘째, 지향하는 먹거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비전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문제
- 로컬푸드는 확실하나, 친환경(유기농)은 과연? 지속가능한 먹거리(굿푸드 vs 그렇지 못한 먹거리)에 대한 비전은 과연 무엇인가?
- 셋째, 유통적 관점, 공급자적 관점에서 푸드플랜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(유통정책과 관장)
- 포괄적 의미에서의 생산-소비 연결활동이 아니라 그 중에서 협소한 유통만 보고 있다는 한계 (특히 ##시 푸드종합센터 개념): 로컬푸드 정책이 직매장 유통정책으로 협소화, 형해화되어버린 것처럼 지역푸드플랜 역시 공공급식 유통정책으로 협소화, 형해화되어 버릴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함
 - 지역에서 만들어질 푸드종합센터를 누가 사실상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이 지역푸드플랜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버렸음: 농협이나, 지역생산자조직이나
 - 특히 수요자 주도적 관점이 더욱 필요한 대도시 지역에서 이 문제는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음
- 넷째, 농업계와 시민사회 역시 준비부족, 토론부족 상태
- 농업계 내부의 비전 공유여부: 농민운동, 도시농업, 친환경농업, 생협, 급식운동...
 - 특히, 푸드플랜 논의를 이끌고 나가야 할 먹거리운동 진영이 농업계 바깥의 시민사

6 푸드플랜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?

회진영(환경, 보건, 문화, 지역...)을 끌고나갈 주도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

- 푸드플랜은 플랜이라는 결과물이 중요한가, 플래닝(planning)의 프로세스가 중요한가
 - 행정이 아니라 거버넌스가 먼저 수립되고 나서 그 단위가 중심이 되어 플랜을 만들어야 하는데, 지역푸드플랜의 경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
 - 즉, 1) 지역의 거버넌스가 수립되고, 2) 기본 열개(비전)가 나오고, 3)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오랜 논의와 조사를 거쳐 세부 실천계획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음
 - 하지만, 현재 진행과정이나 기 수립지역의 경우, 정부의 실적위주 추진방식으로 인해 이런 프로세스를 밟기보다는 행정 주도로 형식적 거버넌스를 통해 급하게 플랜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으로 마감될 우려가 있음

3. 제언

- 첫째,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푸드플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의견수렴의 장을 만들 필요: 다양한 관련 분야들과의 협업과 협력
- 둘째, 사회혁신 차원으로 끌어올릴 필요: 먹거리/푸드플랜을 핵심사례로 접근
 - 그래야 지역푸드플랜도 제대로 갈 수 있을 것

<해외 사례>


1. 정부의 공론장 마련: 프랑스, 스웨덴, 핀란드, 호주

- 프랑스 정부의 2017 먹거리 국민 대토론(États généraux de l'alimentation)¹⁾ 개최: 세부이슈별 온라인/오프라인 토론 진행하고, 그 결과를 반영하여 <먹거리정책 로드맵 2018-2022>(2018.2)를 발표하고, <농업부문 거래관계의 균형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위한 법률안>(약자로 <먹거리법 loi Alimentation>, 또는 <2018 먹거리법>) 발의(현재 의회 심의 중)




1) <https://www.egalimentation.gouv.fr>

The most recents ▾
All themes ▾
Rechercher




Production and distribution
How to pay producers more equitably ?

🗨 3539 contributions
👍 34295 votes
👤 6486 people attending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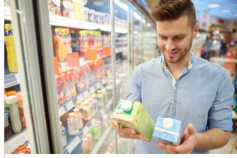
Production and distribution
How to better integrate the reality of production costs ?

🗨 955 contributions
👍 8351 votes
👤 2743 participants



Production and distribution
How to accompany the transformation of our agriculture?

🗨 4096 contributions
👍 43919 votes
👤 10286 participants



Consumption
How to better inform consumers?

🗨 2000 contributions
👍 19208 votes
👤 6112 participants

1. 스웨덴, 핀란드, 호주도 국가푸드플랜 수립시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단체들과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1년 이상 수렴하는 과정을 거침
2. 시민사회의 개입과 비전제시: 프랑스, 호주, 영국, 미국, 캐나다
 - 먹거리운동진영(네트워크 조직) 차원에서 국가푸드플랜에 대한 비판과 제안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
3. 부처 간 협력: 프랑스의 중앙부처간 거버넌스 및 지방정부의 부처 간 협약 사례
 - 국가푸드플랜 추진시에 최상위에 <국가 운영 및 모니터링 위원회>(CNOS), 중간에 <부처 간 집행위원회>(CEI)와 함께, 하위에 <부처 간 워킹그룹>(GTI)을 참여부처인 14개만큼 구성하여 주요 부처들 간의 협력을 제도화
 - 광역(레지옹) 수준에서 부처 간 파트너십 기본협약을 체결하도록 중앙정부가 지침을 제공: 레지옹 농식품부(DRAAF), 보건국(ARS), 교육청(Rectorat)이 핵심 부처
4. 사회혁신 프레임을 통한 추진: 유럽연합의 Food 2030, 도시-농촌(도농상생) 리빙랩 사례, 먹거리정책과 사회혁신(유럽, 캐나다) 사례

- 결론적으로,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프로세스를 좀 늦추는 것이 좋지 않은가? (특히 국가푸드플랜)
- 임기 중에 국가푸드플랜 최종안을 발표하고 시행하려고 하기보다는 국가적 공론 장을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

4. 토론: 학교급식/공공급식과 푸드종합센터 논의

- 구매자가 제도/법률/정책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?
 - 학교, 어린이집, 사회복지시설, 공공병원, 공공기관 등
 - 구매자 차원에서 식재료 구매제도의 변화가 함께 따라야 종합적인 개혁을 완성할 수 있음
- 공급자로서 정부/지자체는 예산을 투입하여 구매, 제공하는 정책적 지역생산물의 현물지원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함
 - 정책적 지역생산물의 현물지원(A)과, 그 외 식재료의 (독점적) 공급(B)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므로, 서로 혼용해서는 안 되며 분리해서 접근해야 함
 - 따라서 A는 지정공급자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함: 미국 농무부가 학교 등 공공급식에 저가로 제공하는 USDA food 사례, 일본 광역 현 학교급식회(재단)가 학교에 식재료(쌀, 우유, 밀가루, 지역농산물 사용 위탁가공품 등)를 제공하는 사례, 브라질 정부의 먹거리공공조달(PAA) 프로그램 사례 등
 - 다만, B는 두 가지 해결책으로 나누어짐:
 - ① 구매자의 의지대로 자율적으로 계약함으로써 다양한 사례를 장려하고(단, 구매자 주도의 공동구매정책을 통한 가격협상 인하노력은 바람직함), 정책에 잘 따를 경우 포지티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(민간 주도적 인증마크 등)
 - 공공기관에 대한 미국의 굿푸드 프로바이더(Good Food Provider) 인증이나, 영국의 푸드포라이프(Food for Life) 인증 사례 참조)
 - ② 타 물품의 공공조달방식을 준용하여 B에 대해서도 지역단위로 조달기구를 통해 공공 조달하는 방법
 - 진정한 학교급식/공공급식 조달센터를 확립하고, B 부분 식재료에 대해 가격협상, 물품선정, 배송서비스를 제공(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방식)
 - 다만, 조달센터는 구매자(학교, 복지시설, 공공기관)를 관장하고 있는 중앙부처(교육부/교육청, 보건복지부, 지자체)의 권한을 벗어나기 어려움: 통합적인 조달센터가 되려면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운영되어야 함